



함께 고민하는 전력시장의 변화

- 2차관 주재, 제1차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최남호 2차관 주재로 7.25.(목)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로,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01년 19개사 → '24.6월 6,558개사) 확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관련 제도·정책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함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간 제시되었던 전력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남호 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공정한 질서가 적용되는 우리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하며, “실시간시장 및 용량 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남혁 (044-203-3910)
		담당자	사무관	조우신 (044-203-3913)



1. 추진 배경

-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제주 시범사업 등 시장개편 본격화
 - 근본적인 제도 재정립 과정으로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중요
- ⇒ 유관기관·전문가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고, 既 발표한 제도개편 과제도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 확보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7.25(목) 16:00~17:30, 무역보험공사 6층 회의실
- (참 석 자) 산업부 2차관(주재) 등 협의회 위원 14인
 - * (산업부) 전력정책관, (전력거래소) 이사장,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
 - (유관기관) 한전 기획부사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전문가) 김성수·박종배·유승훈·조영상·조홍중·주성관 교수, 김범조 CPA, 조영재 변호사
- (논의안건) ❶ 전력시장 제도개편 추진단·협의회 운영계획
 ❷ 제주 시범사업 운영현황 점검

3.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 시	일 정	비 고
16:00~16:10 (10')	▶ 기념 촬영 등	
16:10~16:13 (3')	▶ 산업부 2차관 모두발언	
16:13~16:27 (14')	▶ 안건 발표 (2개, 각 7분)	전력시장과장 시장혁신처장
16:27~17:27 (50')	▶ 자유토론	
17:27~17:30 (3')	▶ 산업부 차관 마무리 발언	